

통일교육지침서

2008 • 일반용 www.uniedu.go.kr



CONTENTS

I. 통일교육의 목표	5
II.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1
1. 통일문제의 이해	13
가. 통일문제의 성격	13
나. 분단의 배경과 피해	14
다. 통일의 필요성	16
라. 통일의 접근방식	17
마. 통일국가의 미래상	19
2. 북한 이해	21
가. 북한에 대한 인식	21
나. 북한의 정치·외교	22
다. 북한의 군사	26
라. 북한의 경제	27
마. 북한의 사회·문화	29
바. 북한의 변화와 전망	35
3. 통일환경의 이해	37
가. 국제정세의 변화	37
나. 통일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38



S

4. 통일정책	40
가. 우리의 통일방안	40
나.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	41
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45
5. 통일을 위한 과제	49
Ⅲ. 사회통일교육의 지도방법	53
1. 사실적 접근에 기초한 통일문제의 이해	55
2. 열린 대화와 토의의 중시	56
3. 생활관련 소재를 통한 흥미와 호기심 유도	56
4.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57
5. 현안쟁점과 사례 중심의 통일문제 접근	58
6.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활용	58
7. 강의식 방법의 발전적 적용	60
Ⅳ. 부 록	61
현장 통일교육 안내	63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목록	70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웹사이트	72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방송프로그램 현황	75

I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통일교육의 목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천명한 우리나라 헌법전문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다음의 세부적 목표들을 추구한다.

1.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통일관 정립

우리 헌법은 우리 사회의 기본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남북한이 하나가 된 민족공동체의 틀 속에서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남북한 구성원들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사회적 관용과 배려의 정신이 존중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통일한국에서도 민족적 단결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주도적 이념으로 작용할 것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통일한국이라는 정치공동체는 그 인식의 토대를 민족적 유대로부터 찾는다. 민족공동체 의식은 장기간의 분단 상황 속에서 파생된 남북한간의 이질감을 극복하며 통일한국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순조롭게 뿌리내리도록 하는 토대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지향적 통일관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이 선순환적 구조를 이루는 정치공동체로서의 통일한국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이 상호 조화롭게 융해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통일관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평화통일의 의지와 역량의 함양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사명감을 신장시키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자원들이 남북한간의 소모적 경쟁에 소비되고 있다. 통일의 달성은 이러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나아가 민족의 위상과 역량을 한층 더 높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단순히 의지의 표출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으며, 통일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길러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 및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어내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추구하는 정부의 노력도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3. 통일환경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21세기의 국제정치 질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관계 변화와 북한 사회의 변화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통일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 통일 환경과 북한의 실상 등에 대해 국민들이 왜곡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관점에서 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평화적 통일을 위한 현실적 정책대안이 무엇 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에는 국제적 안보환경의 변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북한의 핵문제 등에서 비롯되는 여러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이들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 역량이 갖추어 질 때만 통일의 노력이 생산적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II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 통일문제의 이해
2. 북한 이해
3. 통일환경의 이해
4. 통일정책
5. 통일을 위한 과제



1

통일문제의 이해

가. 통일문제의 성격

민족 내부분쟁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성을 지닌다.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미·소의 분할점령으로 인해 양분되었다. 이후 북한의 도발에 의한 6·25전쟁으로 남북간에는 상호 증오심과 적개심이 깊어졌으며,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한 간의 심리적 분단도 고착화되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동북아의 국제정치적 요충지가 되어 왔고 한반도의 통일문제에도 이들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라는 이중적 특성을 갖게 된다.

남북한 당사자의 노력과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의 이중적 특성을 감안할 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주변국의 관심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자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자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통일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은 역사적 당위성을 지니며 주변국들의 이익과도 부합할 수 있음을 대외적으로 설득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통일노력에 대한 이들 주변국의 지원과 협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통일문제의 이중성을 이해시킴으로써 통일이 우리 민족의 결집된 노력과 함께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통해 가능함을 인식시킨다.

나. 분단의 배경과 폐해

(1) 분단의 배경

통일을 왜 이루어야 하고 어떻게 이를 것인가를 논의하려면, 먼저 현재의 남북 분단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성격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의 식민통치와 뒤이은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으로 지리적 분단이 이루어졌다.

남북 분단의 기원은 서구 열강의 세계 분할지배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식민통치로 소급될 수 있다. 이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측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였다.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할된 한반도에서는 미·소간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면서 지리적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남북이 각각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정치적 분단이 이루어졌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영국·소련이 한반도 신탁

통치를 결의하자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은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 여부로 갈려 상호 대립하게 되었다. 결국 1948년 남과 북은 대한민국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한반도의 정치적 분단이 초래되었다.

6·25전쟁으로 심리적 분단이 심화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한 6·25전쟁은 민족구성원 상호간의 깊은 상처와 적대감을 심화시키는 심리적 분단으로 이어져 한반도 분단이 심화·고착화되었다.

(2) 분단의 폐해

분단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신적·물질적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민족적 차원에서는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공동번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단은 대륙으로 통하는 통로를 단절함으로써 남한을 지리적 폐쇄 공간으로 만들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길목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으로 인해 대륙과의 육로 통행이 차단됨으로써 사회·문화·경제적 발전이 크게 저해받고 있다.

분단은 남북한간 대결구도를 지속시킴으로써 상생과 공동번영 속에서 조화로운 민족공동체의 삶을 펼칠 기회를 제약해 왔다.

분단 상황은 남북한 사이에 소모적인 군비경쟁과 체제경쟁을 유발하고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내재한 군사적 대립을 존속시켰다. 이 같은 대립과 전쟁의 위험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다양한 경제적 부대비용을 초래하면서 남북한의 경제발전 추동력을 제약하였다.

아울러 분단 상황은 수많은 이산가족들과 남북역류자·국군포로 가족들이 혈육과 이별한 채 살아야 하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또한 남북한의 적대적 대결구도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한반도 분단이 국제적 요인과 민족 내부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단극복을 위한 통일과정도 남북한간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라는 이중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인식시킨다.

분단의 장기화가 개인의 삶과 민족 전체의 발전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과 폐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일깨워 준다.

다. 통일의 필요성

통일은 분단으로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구현시킨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60여 년에 걸친 남북분단은 민족구성원 간 상호 불신,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며 민족통합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어 왔다. 통일국가의 실현은 우리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재결집시키고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통일은 남북 이산가족 등의 고통을 해소한다.

분단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남북으로 갈려있는 이산가족들이다. 남북간 분단 상황에서 장기간 교류와 왕래가 끊긴 채 고통 받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통일은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창출하고 한반도를 동북아 번영의 중심국가로 이끈다.

통일은 한반도에 단일 경제권을 형성시킴으로써 내수 시장의 확대와 함께 남북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보완성을 높여 경제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다. 남북이 통합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북아 시대의 번영을 주도할 것이다.

통일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없애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기여한다.

분단구조 아래서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는 남북한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통일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없애고 동북아 지역의 불안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분단의 폐해를 환기시키고 통일이 나와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 줄 편익이 무엇인가를 이해시킴으로써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라. 통일의 접근방식

통일은 남북간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

통일은 전쟁 등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민족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무력에 의한 방식은

민족의 비극을 초래하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민족공멸의 상황을 가져올 것이다.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화해협력의 정신에 의거하여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외교 등 다각적 분야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남북한이 통일역량을 점진적으로 구축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야 한다.

오랜 분단에서 비롯된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남북한 체제의 차이, 경제적 격차, 문화적 이질성 등을 그대로 둔 채 급격하게 통일을 추구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점진적으로 통일 역량을 구축해 갈 때 공존공영을 위한 민족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남북한이 포괄적 교류협력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남북한 협력공동체를 달성할 때 실질적인 통일 상황이 구현될 것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통합 과정을 원만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이 필수적임을 인지시킨다.

마.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한국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통일의 결실을 공유하는 진정한 민족공동체 국가를 실현시킨다.

통일 직후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정치적 이념의 차이, 경제력의 격차, 사회·문화적 가치 및 관습의 차이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통일국가는 이러한 격차와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하나의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때 민족공동체는 혈연적 의미의 폐쇄적 민족 개념을 넘어서서 열린 민족의 개념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통일된 한국사회 역시 다문화 사회라는 21세기의 시대적 조류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은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는 선진 복지국가로 구현한다.

통일국가는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창의가 존중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보장되는 사회이어야 한다. 또한 민족의 총체적 역량이 발현된 선진경제를 기반으로 풍요의 혜택이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복지국가가 구현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구성원들은 활동영역의 확대와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향유한다.

통일한국은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전쟁 위협 소멸에 따른 군사비 감소,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의 상호보완적 활용 등이 가능하며, 국제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인구 8천만명 수준의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이 고양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의 구성원 개개인은 보다 개방된 공간을 배경으로 거주, 여행, 결혼, 직업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고 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한다.

통일은 아시아 대륙 및 유럽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열린 공간의 시대를 한민족에게 제공할 것이므로 통일한국은 21세기의 동북아시대를 선도하며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통일국가의 미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며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도록 한다.

2

북한 이해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즉,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전반적 실상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은 통일을 위한 화해협력의 대상임과 동시에 경계의 대상이다.

분단이 해소되기까지 북한은 우리와 함께 통일을 만들어 갈 동반자이자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까지 대결의 상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을 대결의 대상으로만 볼 경우 남북한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어렵고, 반대로 북한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면 분단구조하에 있는 남북한 현실을 경시하는 통일 지상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측면을 인식하는 가운데 서로간의 적대의식을 감소시키고 동포애를 발휘하여 북한을 평화공존의 동반자 관계로 이끌어가는 지혜와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인식이 필요하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상이한 체제를 유지해온 결과, 법적·체제적으

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점들이 존재한다.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이질적인 요소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는 단순히 드러난 현상을 파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을 야기하는 작동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확한 자료와 정보에 바탕을 두고 북한사회 전반에 대한 종합적·균형적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이해는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실천적 차원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한 이해는 남북한 주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이해함으로써 북한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극복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출 수 있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가치관 등 그들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은 통일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경계의 대상이라는 이중성을 이해시키고,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사회의 전반을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북한의 정치·외교

(1)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

북한체제는 수령과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전 사회가 일원적으로 편

제된 유일지배체제이다.

북한체제는 ‘수령의 사상, 즉 주체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유일지배체제이다.

유일지배체제는 권력이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령을 중심으로 사회전체가 일원적으로 재구성되며 이를 합리화시키는 이론적 기반(혁명적 수령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대가정론)과 사회적 재생산의 기초가 되는 실천적 기반(일인 절대권력체제, 사회동원체제, 개인숭배 등)을 특징으로 한다.

김일성-김정일의 절대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이론들은 지도자를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해주는 아버지’로 규정하고 북한주민에게 절대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와 개인숭배를 통해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지도자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주어진 현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한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를 토대로 하지만, 실제로는 군을 앞세운 선군정치(先軍政治)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김정일의 절대 권력과 이들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독특한 체제인 동시에 집단적 소유와 계획경제, 당-국가의 지배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체제의 기본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당이 모든 권력의 원천을 이루는 당-국가체제는 1990년대 중반 김일성의 사망과 극심한 경제난, 대외고립 등의 위기 상황에서 군 중심의 위기관리 체제로 변화되었다. 이후 북한은 체제유지와 위기관리를 위해 군대를 내세워 체제의 균열과 붕괴를 막기 위한 선군정치를 운영하고 있다. 선군정치는 군이 당보다 권력우위에 있다기보다는 군

대가 노동계급을 대신해 혁명과 건설의 주력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대는 국가보위와 경제건설, 혁명적 군인정신의 사회적 확산 등 국가 전반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나, 정작 선군은 군림의 수단이 되어 군대의 부패와 주민 착취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 정치체제는 김일성-김정일의 절대권력과 주체사상에 지배되는 독특성과 당-국가의 지배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김정일 집권 이후 선군정치를 앞세운 체제운영의 특징을 김일성시대와 비교하여 변화와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규명하도록 한다.

(2) 북한의 대외정책

탈냉전 이후 북한은 체제의 안정성과 지속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서방 세계와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등 외교의 다변화를 통한 실리를 꾀하고 있다.

냉전시기 북한은 체제유지와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필요한 국제적 여건조성을 목표로 외교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탈냉전 이후에는 체제의 안정성과 지속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실리외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은 체제 안정성 확보와 경제난 해소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면서 일본과 관계진전 및 중국, 러시아와 우호관계 증진 등 국제고립을 탈피하고 대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유럽연합(EU), 호주 등 서방국가들과 수교하고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관계개선에 나서는 한편,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등 다자주의 외교노선을 취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북한은 냉전 종식 후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로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에 대해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얻기 위해 대결과 협상을 오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대외전략은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켜 왔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4년 제네바합의, 2000년 북-미 공동커뮤니케,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등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북한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보장을 위한 핵심 관건으로 보고, 대미 대결 정책을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 우호관계 증진을 통해 대미견제와 체제보장을 기하려는 북한의 전략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은 전통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의 압박정책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 경제·외교 등 다방면의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시대와 달리 중·러 양국과 미국의 관계는 긴장을 형성하면서도 경제적인 협력과 교류를 진행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외교전략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반대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탈냉전 이후 북한이 경제회생과 체제보장을 위해 실리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공세적인 대외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관계의 현실과 북한 특유의 외교전략을 설명한 후 그것이 통일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다. 북한의 군사

북한은 체제유지와 대외협상을 위한 도구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북한의 군은 조선노동당의 혁명무력으로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방과 경제건설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북한은 현재 117만 명의 정규군과 함께 인구의 약 30%를 예비 병력으로 보유하는 등 병력 보유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 경제력의 상당 부분을 군사비로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휴전 이후 무기의 자급자족을 위해 많은 군수공장을 건설하는 등 군수산업의 발전에 치중해 왔다. 그 결과 일부 전자 및 정밀 유도무기, 고도의 항공장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사일 등 각종 전략무기를 개발 배치하는 등 무력증강을 꾀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무력증강 움직임은 대남 군사우위 및 대미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뿐 아니라 필요시 이를 사용하여 대남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악화된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주요부대 훈련은 규모를 축소하여 정상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군수품은 양적으로 감소하였지만 군수품 정상 보급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은 자위국방의 원칙에 의해 군수산업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 등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라. 북한의 경제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경제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건설 이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을 1960년대 초반에 완료하고, 중앙의 계획당국이 국영기업소, 협동농장, 기관 등에 생산지표와 경영지표를 하달하는 경제체제를 강화·유지해 왔다.

1990년대 경제난이 심화된 이후 계획경제시스템이 마비되고 자생적인 시장경제가 발달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시장경제 기능을 일부 도입하는 등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획경제 시스템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있다.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대외경제 관계의 급격한 축소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식량난, 에너지난, 생필품난, 외화난 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국부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북한 경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자구노력을 통해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공장 가동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북한은 경제안정과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시하였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야기된 재정의 위기, 암시장의 성행 등에 직면하여 2002년 7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시하였다. 7.1조치는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의 틀 내에서 시장경제기능을 일부 도입한 것이다.

북한경제는 7.1조치 이후 경제의 활성화와 동시에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7.1 조치는 제한적인 경제개혁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음성적이었던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북한경제에는 일부 생산성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인플레이션, 빈부 격차의 확대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부분적으로 대외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원칙으로 자력갱생 노선을 유지해 왔으나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권과의 관계 확대가 불가피해지자 1990년대 이후 대외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다.

1991년에 최초로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개설하고, 2002년에는 개성

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 등을 남한 자본이 단독 개발하는 형태로 특구를 개설하였다. 2002년에 신의주특별행정구도 개설하려 하였으나 행정장관 임명을 둘러싼 북·중간 이견 등 추진 과정상의 문제로 무산되었다. 한편, 60여개에 이르는 대외경제 관련법도 꾸준히 제·개정하였다.

북한은 부분적인 대외개방과 더불어 남북경협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남북경협은 단순교역, 위탁 가공 교역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1998년 이후부터는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 투자 협력사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최근 북한은 국제경제 질서에 편입하기 위해 국제경제기구 가입을 시도하고, 매년 국제경제규범과 시장경제 학습을 위해 경제 관료들을 중국, 유럽, 호주 등 시장경제 국가에 파견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 경제의 기본구조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을 설명하고, 그것이 지닌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및 금강산 관광사업·개성공단 개발 등 개혁·개방조치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마. 북한의 사회·문화

(1) 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생활

북한 주민의 규범적 가치관은 평등주의와 집단주의이다.

북한은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체제로서 토지·자본·공장 등 주요 생산수단을 국유화·집단화해 왔으며, 평등한 분배를 추구하

는 등 주민들에 대해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해왔다. 또한, 헌법에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고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북한 사회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 가치관을 강조해 왔다.

최근 북한 주민의 가치관은 개인주의적·자본주의적 성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경제난 이후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강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공장 기업소나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장마당에서 개인장사를 하거나 텃밭에서 개인농사를 짓는데 더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점차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약화되고, 소위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보다는 금전적 인간관계가 우선시되고 있으며, 돈을 중시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 주민이 남한사회의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대남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주민은 북한당국에 의한 사상교양 학습을 통해 남한주민을 ‘혈벗고 굶주린 불쌍한 동포’ 혹은 ‘미제의 압제에 시달리는 해방의 대상’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우리의 대북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 과정에서 남한사회의 발전상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경제난 이후 생계활동에 따른 사회이동과 정보소통이 과거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북한주민은 거주이전과 통행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국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생계활동을 위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통행증 발급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고, 무허가 여행을 하는 주민이 늘어나는 등 주민의 사회이동이 활발해졌다.

사회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유통이 활발해지고 남한사회를 비롯하여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서 북한주민의 의식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여성의 생계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위상이 변화되고 있다.

북한은 남녀평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북한여성은 사회노동과 집안일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 노동에 시달리면서 가정에서는 가부장적 권위주의 아래 불평등한 지위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중이 커지면서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높아지고 북한 여성들의 이혼청구가 늘고 있고 만혼, 결혼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경제난 이후 가치관과 일상생활의 변화가 북한체제 변화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탐색해보도록 한다.

(2) 북한의 교육과 학교생활

북한 교육의 목표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 육성이다.

북한의 교육목표는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지닌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 즉 ‘주체형의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다.

주체형의 인간은 북한체제가 필요로 하는 구성원으로서 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제1의 덕목으로 삼고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무장되어 집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영웅적 존재로 선전하고 있다.

북한 교육과정의 특징은 교육과 정치의 결합, 교육과 생산의 결합, 교육내용의 선택권 부재 등이다.

북한에서 교육은 사상혁명의 핵심적 수단으로 여겨지므로 학교에서도 정치사상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 노동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은 생산에 필요한 실제 기술기능을 훈련하고 생산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교육내용과 방법은 국가에 의해 규격화되어 하달되므로 개인의 선택 여지가 거의 없으며, 정해진 방향과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학교교육은 교과수업 외에 청소년 조직활동과 방과 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조직 활동은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북한체제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학생들은 소학교 2학년부터 소년단, 중학교 4학년부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서 활동하며, 이러한 조직은 학교생활과 일상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동료학생의 생활을 집단적으로 규율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방과 후에는 개인별 선호를 반영하여 음악, 체육 등 소조(동아리)에서 활동하고, 학교에서 일을 하거나 농장에 나가 일손을 돕기도 한다. 특히 우수한 실력과 재능을 갖춘 학생으로 선발되면 평양을 비롯하여 각 시·군에 있는 전문교육기관(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에서 음악, 무용, 수예, 태권도, 물리, 수학, 컴퓨터 등의 교육을 받는다.

경제난 이후 북한은 정치사상 교육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컴퓨터, 외국어 등 실용적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사상적 이완 현상을 막기 위해 정치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IT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중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하고 컴퓨터 수재반도 운영하고 있다.

외국어 교육은 개혁, 개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과학기술이 강조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영어의 인기가 높아 대부분 중학교에서 영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의 교육목적, 교육제도, 교육내용을 이해하고, 우리와의 차이점과 공통점 비교, 최근의 변화내용을 파악한다.

북한의 학교생활을 파악함으로써 북한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킨다.

(3) 북한의 문화

북한의 문화는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에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을 위한 문화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우리 민족의 고유 전통문화에 사회주의 요소가 가미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명절은 전통적 민족명절 이외에도 김일성·김정일 생일, 정권수립일, 당 창건일, 헌법절 등 북한체제의 특색과 사회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에는 경축 분위기에 맞추어 평양과 지

방의 모든 극장에서 예술단체들이 공연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체육대회, 집회 등의 여러 행사들이 진행된다.

북한은 주민들의 사상교양의 수단으로 군중문화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군중문화 활동은 일반 군중들이 참가하여 진행되는 문화활동으로 사상교양 수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연, 담화, 보고, 해설독보, 영화감상, 방송청취, 전시회 관람, 체육경기 등의 형태로 실시된다.

이는 각급 학교나 기관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예술인에 의한 ‘예술기동선전대’와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술소조’로 나누어진다.

북한주민은 여가활동으로 영화관람, TV시청, 노래 등을 주로 하고 있다.

북한에서 개인적 여가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노력동원, 회의, 생활총화 등 조직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정규 일과 후에도 개인장사 등 부업으로 여가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서도 북한 주민들은 영화관람, TV시청, 노래, 장기 등의 여가 활동을 하며, 낚시, 등산 등을 즐기는 계층도 일부 있다. TV드라마는 김일성 주석의 가계와 항일 혁명투쟁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내용도 많아지고 있고,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는 주민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절이나 연휴에는 주로 영화 관람을 하는데 북한에서 영화는 전파력이 크고 이동 상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의 경우 한국 고유의 문화전통이 사상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왜곡되어 왔음을 이해하고, 그 결과 남북한 간의 문화적 이질감이 심화되었음을 밝힌다.

통일 이후 문화통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개인적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바. 북한의 변화와 전망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이른바 ‘북한식’ 개혁·개방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의 붕괴 원인이 수정주의를 받아들이고, 당이 군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이 걸어온 변화의 길을 꺼려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대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소위 ‘북한식’ 변화의 길을 모색 중이다.

북한이 의도하는 ‘북한식’ 변화란 체제유지를 우선시하는 제한적이며 점진적인 변화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의 변화 사례도 학습하고 있다.

북한의 제한적인 개혁·개방은 체제유지와 관련되어 있다.

북한은 완전한 개혁·개방을 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첫째, 주민통제의 문제이다. 북한 주민의 외부세계와의 접촉 확대, 북한사회로의 외부문화 유입 증대는 주민에 대한 당국의 효과적인 통제를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을 우려한다. 북한주민이 훨씬 우월한 남한체제를 인식하고, 남한과의 통일을 원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힘들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와의 관계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인권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갖고 있는데, 북한지도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량살상무기 폐기 및 인권개선을 자신들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유지를 우선시하는 가운데 단계적·점진적으로 개혁개방을 시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 실태를 알아보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3

통일환경의 이해

가. 국제정세의 변화

오늘날 국제사회는 새로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안정 요인들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대 이래 국제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탈냉전 등의 세계사적 거대 조류를 경험해왔다.

이 같은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긍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한경쟁의 격화, 다양한 외부 문화의 유입 등이 초래하는 가치관의 혼란, 테러 및 정보전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증대, 상이한 종교·인종·문화간의 갈등 격화 등 새로운 시대 환경으로 인해 불안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9·11테러를 계기로 한 비대칭 위협의 증대는 세계안보질서의 속성 자체를 변화시켰으며, 한반도와 동북아 환경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세계화의 조류가 거세게 밀려오는 시대적 상황에서 동북아는 이념 대립의 지역에서 국익을 위한 국가간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국가들간의 경쟁과 협력 관계는 점차 복잡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9·11테러 이후 재설정된 미국의 외교 기조와 전략이 동북아 지역에 파급효과를 자아내며 기존의 역내 질서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

다. 중국의 경제발전, 러시아의 재 부상, 일본의 보통국가화 등도 동북아 역내 정세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

또한, 핵무기,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한 우려 역시 증대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안보는 물론, 역내 안보에도 심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도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국제질서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 및 국제 안보환경과 연계되어 있음을 주지시킨다.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가 남북화해와 통일에 장애요인임을 이해시킨다.

나. 통일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의 성격과 내용도 변화한다.

21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한·미동맹의 발전적 변화,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동북아 지역협력의 확대, 북핵문제의 우선적 해결 등과 같은 다양한 과제들을 우리에게 부과하고 있다.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참신한 시각과 접근 방법으로 이들 과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변화하는 통일환경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대내외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한다.

우리는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통일환경에 우호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변화된 통일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와 도전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주어진 통일환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이해시킨다.

4

통일정책

가. 우리의 통일방안

우리 정부는 1989년 이후 보완·발전시켜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기조 위에서 통일 과정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남북연합」단계는 화해협력 단계에서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도기적 통일체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기 대외적으로 주권을 유지하되 남북정상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처 등 공동의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 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체를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통합을 실현하는 단계로서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의회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

거를 통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된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우리의 통일방안은 통일과정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계를 밟는 것이 바람직한 경로임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나.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정부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데 있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1971년 8월 우리측의 제의에 따라 분단 26년 만에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면서 인도적 분야에서부터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고위당국자간의 비공개 접촉과 방문을 통해 1972년 7월 4일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간 합의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에서 남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에 합의하였다.

제4공화국 정부는 1973년 6월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후 제5공화국 정부는 1982년 1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고,

2월에는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 이산가족 편지교류 및 상봉, 설악산-금강산 자유관광지 개발 등을 포함한 20개항의 구체적 시범사업 실천을 제안하였다.

1984년 9월에는 우리측이 북한의 대남 수재물자 제공 제의를 받아들이고, 11월에는 남북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일련의 회담이 성사되었으며, 1985년 9월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었다.

제6공화국 정부는 1988년 '7·7 선언'을 통해 적극적 남북대화 추진 등 북방정책을 도모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제6공화국 정부는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7·7선언의 기본 취지는 남북이 서로를 경쟁이나 대결의 상대로 보지 않고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협조하며, 분단의 원인이었던 냉전체제의 극복을 위해 남한은 중국과 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와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북한이 미국,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여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것이다.

이후 7·7선언을 통한 남북한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의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 1990년 8월 남북교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우리 국민, 기업, 단체 등의 대북접촉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이 같은 날 동시에 공포됨으로써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한편, 1990년 9월에는 남북한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공식적인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이후 1992년 2월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남북한 정부간에 채택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과 함께 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불가침,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 등 총 4장 2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을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향한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점증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서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국제사찰을 회피하지 않고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1989년 9월에는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변화된 국제환경에 발맞추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정치적 통합 여건이 성숙되면 단일 민족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민족통일을 통해서 국가통일까지 실현한다는 것이다.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 아래 우선 남북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이어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완전한 통일 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993년 2월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의지를 천명하는 등 적극적 대화를 모색하면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다 발전시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곧 이어 제1차 북핵 위기가 야기되면서 남북관계가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1994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였으나 회담 직전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무산되었다.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통일의 달성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일명 햇볕정책이라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2000년 6월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의 두 정상 ‘6·15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6·15 공동선언’은 통일문제,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경제협력, 당국간 대화 및 김정일 위원장 답방 등에 대한 남북한간의 합의를 담고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 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6·15 공동선언문 속의 ‘민족끼리’의 협력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부분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당국간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적십자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대화가 진행되면서 남북한간의 실질적 문제들이 논의되고 실천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이 시기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이산가족 상봉, 부산 아시안게임 및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의 북측 선수단 참가 등 다방면에 걸쳐 남북간 교류협력이 양적으로 크게 증대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남북교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안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롯하여 1999년 6월과 2002년 6월에는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인한 남북 해군 사이의 교전, 2003년 1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 등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제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였다.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남북한 및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②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③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④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2007년 10월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하였다. 선언문을 통해 남북은 상이한 체제에 대한 상호존중을 토대로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주의, 외교 등의 영역에서 통일을 위한 공동사업들을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북한의 변화가 미미한 가운데 합의·추진된 남북간 교류와 협력, 대북지원 등은 국민적인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미흡하였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남북한간 갈등과 적대 구조 속에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기반을 다지기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곁들여 균형 있게 설명한다.

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 그러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론 분열과 일방적 대북지원 주장 등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으로 인해 기존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됨에 따라 대북정책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국민적 합의의 바탕위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남북관계 발전 및 남북관계의 역학 구도도 변화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통해 우리의 국력이 신장된 가운데 북한 경제의 대남 의존도가 증가하였고, 북한 주민의 대남의식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변화를 견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북핵문제가 한반도 정세를 가름하는 주요 변수가 됨에 따라 6자 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의 틀인 동시에 향후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고려요소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 과정과 관련한 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변화를 능동적으로 창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호혜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해 나가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비핵)하고, 북한의 변화(개방)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진입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확충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추진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실용과 생산성에 입각하여 국민이 동의하고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내는 정책을 추진하고, 북한주민의 삶 개선과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해 나간다.

둘째, 북핵 폐기 원칙은 철저히 견지하여 원칙있고 성과있는 대화를 추진하되, 그 접근방식은 유연하게 대처해 나간다.

셋째,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초당

적인 협력을 상시화하며, 생산적이고 투명하게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해 나간다.

넷째,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유관국과의 조율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조를 확보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남북관계 발전을 지향해 나간다.

2008년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의 목표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3대 목표」, 「12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위한 「3대 목표」·「12대 과제」

I. (비핵·개방·3000) 이행 준비 (⇒ 북한의 비핵화 유도)	①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촉진·지원
	② (비핵·개방·3000) 이행계획 수립
II.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 한반도 경제 선진화 기여)	③ 남북경협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④ 산림분야 협력
	⑤ 농수산 협력
	⑥ 자원개발 협력
	⑦ (나들섬 구상) 구체화
III.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 (⇒ 남북 주민의 행복 추구)	⑧ 이산가족 상시상봉 체계 구축
	⑨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진전
	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⑪ 대북 지원의 분배 투명성 제고
	⑫ 북한 인권 개선 노력

첫 번째 목표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점진적인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남북한 간의 공동번영의 기틀을 다지고자 하는 목표에 기초한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핵문제 해결,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포괄적 해법으로 북핵문제의 진전과 북한의 개혁·개방이 진행되는 과정에 발맞춰 한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등 북한경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순차적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목표는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로 이를 위해 남북경협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산림녹화, 농수산 및 자원개발 협력, 나들섬 구상 구체화 등을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개성공단의 3통(통행·통관·통신)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남북경협의 장애물을 제거하며, 황폐화된 북한 산림을 복원하여 환경재해를 예방하고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의 복구를 지원한다. 또한 자원외교의 대상을 북한으로 확대하여 북한과의 자원개발 협력을 하되 경제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나들섬 구상 구체화를 통해서도 지금까지 북한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던 남북경협을 남북간 중립지역(DMZ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남북공동협력모델을 구현하고자 한다.

세 번째 목표는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 으로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이산가족 상시상봉 체계 구축,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진전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강화, 대북 지원의 분배투명성 제고, 북한 인권 개선 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해외에 체류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상황 개선 및 국내 수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정착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대북지원의 분배투명성 개선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식량난 해소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대한 대내외적 지지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5

통일을 위한 과제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통일문제에 동참한다는 의식과 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통일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해관계로 그치지 않고 개인적 차원의 이해와도 직결되는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즉, 통일문제는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인문제이기도 함을 이해시켜야 한다.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통일 논의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은 통일이 가져오는 이익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 부담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내에 민주시민의식 및 평화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만큼이나 사회적 책임감을 자각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

통일한국으로의 출발점은 우리 사회 내부부터 진일보한 평화의식을 고양하고, 사회 구성원간의 차이를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민주주의의 실천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현안들조차도 민주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풀지 못한

다면 남북한의 차이를 극복하는 통일의 과제는 더욱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만 향후 남북한 주민들의 조화로운 통합도 기대할 수 있다.

북한동포의 이질성을 감싸 안으려는 자세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주시민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다. 또한 북한 동포의 행복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 안보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남과 북은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스스로 국가안보를 확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의식과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생산적인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는 남북한간의 불신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다방면에서 남북한간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남북한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상생·공영하는 관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경제, 사회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류협력이 미진한 정치, 군사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여 균형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은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일시적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쌓아가는 노력과 인내가 요구된다.

통일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은 통일의 달성을 위한 필수적 외부 조건이다. 한반도 주변국들과 다면적 협력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들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통일한국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변국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현 단계의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킨다.

통일한국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국가적 차원, 사회적 차원,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구분하여 이해하고,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주지시킨다.

III

사회통일교육의 지도방법



통일교육의 효과는 통일교육의 지도방법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지도방법은 교육수준의 적절한 설정, 내용전달의 효율적 방식 선택, 기자재의 활용 여부 등을 포함한다.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체계가 적절히 설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지도방법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 실시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도방법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1. 사실적 접근에 기초한 통일문제의 이해

사회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을 통해 학습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확보될 경우 학습자는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수행할 것이며, 나아가서 해당 이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학습자의 편향된 가치체계, 왜곡된 이념 성향, 논리적 합리성의 결여 등은 객관적 사실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오도된 판단과 태도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오해와 편견이 부정확한 사실의 보유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 사회통일교육의 핵심과제를 구성하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사회통일교육은 학습자들이 기존에 형성된 선입관에 근거하여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북한사회와 주민생활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북한주민의 실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습자가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을 재확인시키는 교육을 수행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환경 및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도 우선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균형적인 판단을 유도하는 핵심적 요건이 될 것이다.

2. 열린 대화와 토의의 중시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열린 대화와 토의 과정을 통해 타인 의사의 존중, 의사결정의 자세 습득, 협상능력의 확보, 합의도출의 역량 배양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요건들을 습득하게 된다. 통일은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립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루어 나가야 하므로 대화와 토의의 문화 정착은 통일의 선결 조건이 아닐 수 없다.

학습자들이 통일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 의존하기 보다는 열린 대화와 토의의 장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대화와 토의는 통일문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해결방안의 모색 등 통일에 대한 학습자들의 능동적 자세를 견인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3. 생활관련 소재를 통한 흥미와 호기심 유도

교수자는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과 소재를 중심으로 학습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북한 사회의 빈부 격차나 소비 행태를 우리 사회와 비교하면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의 북한 사회의 변화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청소년의 문화 생활이나 가정 내 남녀간의 역할 분담 등을 우리 사회와 비교하는 것도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흥미롭게 이끄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수자는 학습자로 하여금 통일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통일문제의 논의를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학습할 경우 “분단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불이익과 제약을 받고 있는가” 혹은 “통일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혜택과 이익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활용하며 문제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4.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사회통일교육의 대상은 학교통일교육과 달리 연령적, 집단적 다양성을 지닌다. 학습자중에는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있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도 존재한다. 교사, 공무원, 군인에서부터 일반 사기업의 직장인이나 주부에 이르기까지 직업별 특성도 차이를 보인다.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학습자 집단의 특성에 맞추는 교수 내용이나 기법 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습자 집단의 연령별, 직능별 및 성별 가치와 사고의 정향성이나 지적 수준 등에서 차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통일교육은 학습자의 전문성에 부응하는 특성화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특정 그룹에 대한 특정 통일분야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교사들의 경우 북한의 교육제도, 북한 청소년의 생활상 등 학교 현장에서 실제 통일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나 군인 혹은 일반 직장인의 경우도 직능별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관심을 촉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

고할 것이다.

5. 현안 쟁점과 사례 중심의 통일문제 접근

사회통일교육의 대상이 통일문제 전반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거나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교육 기법이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현안 쟁점이나 사례 중심의 통일문제 접근은 학습자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교육의 지루함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중심 교육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구체적 사례를 활용하는 방안은 포괄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좋은 범례학습이 될 수 있다. 분단국의 교류협력 및 통합 사례, 우리 역사상의 통일사례가 주는 시사점, 적대적 관계에서 교류협력의 관계로 이전한 인류역사상의 사례 등은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활용

최근 통일교육에서 많이 활용되는 지도 기법들은 다음의 몇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형 통일교육으로서 여기에는 게임, 퍼즐풀이, 퀴즈, 민속놀이 등이 포함된다.

둘째, 과제분담학습(Jigsaw), 보상중심협동학습(Teams Games Tournaments), PMR(Plus Minus Reconstruction), 이슈중심 접근

법, 프로젝트수업, 신문활용교육(NIE : Newspaper in Education), 이야기 구연(Story-telling), 마인드맵(Mind map), 딜레마 토론 등을 포함하는 구성주의적 통일교육이 있다.

셋째, 북한 영화, 드라마, 예술 다큐멘터리 등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는 통일교육 방법이 있다.

넷째, 북한 풍물, 인문지리 등의 가상체험을 활용하는 통일교육 방법이 가능할 수 있다.

다섯째, 통일관 견학, 남북출입사무소 견학 등 현장체험학습을 활용하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의 초청강연이나 대담도 교육의 지루함을 완화하며 현실감을 부여하는 통일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세미나 혹은 워크숍 등을 통한 통일교육도 강의식 교육의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여덟째,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통일교육방법으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활용 통일교육이 있다. 여기에는 웹 자료, VOD, CD 등을 활용한 통일관련 정보 안내하기, 웹서핑, 웹도우미를 활용한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정보검색·분석하기, 웹토론을 통한 통일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능력 증대하기, 웹게시판을 활용한 통일관련 경험 공유하기, 웹출판을 활용한 통일신문 만들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생활문화 체험하기, 플래쉬 또는 동영상을 활용하는 통일교육 등이 포함된다.

한편,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행사 등을 통일축제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통일문제를 인식하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사의 경우 가족 단위로 참석

이 가능하여 통일에 대한 세대간, 성별 견해 등이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한다.

7. 강의식 방법의 발전적 적용

강의식 교육은 학습자의 지식 필요 욕구와 교육자의 전문적 역량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 가장 효율적인 지식전달 방식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지식의 전달이 일방적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강의식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을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시키는 교육 기법이 가미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법으로는 시청각 자료의 활용, 브레인스토밍, 직소우(Jigsaw), 분임토의, 마인드맵(Mind map) 등이 존재한다.

IV

부 록

현장 통일교육 안내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웹사이트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목록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방송프로그램 현황



현장 통일교육 안내

도라산역

1. 개요

도라산역은 현재 남북 분단의 최접점에 있으며, 다가올 21세기 철의 실크로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남방한계선상의 남측 최북단 역인 관계로 향후 경의선 철도연결이 완료되어 남북왕래가 가능해질 경우 관세 및 통관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지난 2002년 2월 20일 미국 부시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함께 방문하여 북에 평화의 메시지를 보낸 곳이기도 하다.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555
※ 민통선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까지 55.8km, 개성까지 14.2km, 평양까지 256km 떨어져 있음.
- 시설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700m²

2. 출입절차

- 모든 관광객은 임진강역에 하차하여 출입허가 절차 후 도라산역까지 운행하는 열차에 승차
- 임진강역~도라산역간은 지정된 열차로 출입하고 들어간 인원과 나오는 인원이 일치해야 함.
- 출입인원 : 1회 300명(도라산역 방문 120명, 제3땅굴 연계관광 180명)
- 출입인원 제한에 따라 승차권 발매매수를 제한하므로 승차할 역(서울역~문산역간 각역)에 승차권 구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음.

오두산 통일전망대 (홈페이지 : www.jmd.co.kr)

1. 개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오두산에 세워진 통일전망대는 북한지역과 비무장지대 폭이 가장 좁은 곳(강폭 460m)이다. 이 곳에서는 북한의 개성직할시 판문군 관산지역 주민의 농사짓는 모습, 군사 활동, 북녘의 산하, 북한의 각종 시설 등을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각종 북한 전시자료뿐만 아니라, 북한 소학교 재현, 통일염원실, 통일기원 북 등이 설치되어 있다. 최근의 북한 영상물을 통해 북한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상실도 갖추고 있어 민족분단의 실상을 이해하고 통일의지를 다질 수 있는 교육장 역할을 하고 있다.

2. 관람 안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59
- 관람시간(국·공휴일에는 30분 연장됨. 기상조건에 따라 조정가능)
 - 1월~2월 : 오전 9시~오후 5시
 - 3월~10월 :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 11월~12월 : 오전 9시~오후 5시
- 문의처 : (031)945-3171, 3173, 2390 팩스 : (031)945-3172
- 주요 전시내용
 - 옥내 : 기획전시장, 북한전시실, 통일염원실, 북한영상실, 통일전시실
 - 옥외 : 통일기원북, 평화의 상징탑, 망배단, 조만식 선생 동상 등

판문점

1. 개요

판문점은 서울에서 50km 떨어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에 위치해 있으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진 곳이다. 남북회담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며, 국토분단과 동족간의 전쟁이라는 민족의 아픔을 되새기는 산 교육장으로서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고 있다.

2. 관람 안내

- 방문신청
 - 일반인·공무원·정부초청·초청 외국인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제출기일, 신원보증인 등이 다르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신청절차를 거쳐 신청
- 접수처 : 방문희망일 60일 전에 주소지 관할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에 신청 및 문의
- 기타
 - 약 90분 소요(브리핑 30분, 견학 60분)
 - 음주 및 주류 휴대금지
 - 단정한 복장 착용
 - 사정에 따라 방문일정 확정 후에 취소될 수 있음.

도라전망대

1. 개요

- 위치 : 파주시 군내면 도라산리
- 규모 : 연건평 243평, 관람석 500석, VIP실, 상황실, 주차장(30~40대)
- 현황 : 송악산 OP 폐쇄에 따라 대체 신설되었으며 북한의 생활을 바라볼 수 있는 남측의 최북단 전망대이다. 전망 가능 지역은 개성의 송악산, 김일성 동상, 기정동, 개성시 변두리, 기차화통(장단역), 금암골(협동농장) 등이 있다.

2. 관광절차 및 신청

- 관광문의 및 출입신청(개인 및 단체)
 - 임진강관광안내소(031-953-4744), DMZ관광사업소(031-954-0303)
- 출입절차
 - 열차 이용시(일 3회 운행)
 - 출입신청 및 매표 → 열차탑승(임진강역) → 도라산역 → 셔틀버스 탑승
 - 제3땅굴 → 도라전망대 → 통일촌직판장 → 도라산역 → 열차탑승
 - 임진강역
 - 셔틀버스 이용시(약 30분 간격 운행, 약 2~3시간 소요)
 - 출입신청 및 매표 → 셔틀버스 탑승(임진각) → 제3땅굴 → 도라전망대
 - 도라산역 → 통일촌직판장 → 임진각 관광지

임진각 관광지

1. 개요

남북이산의 한을 달래고, 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 모양의 '통일연못', 한국전쟁 당시 포로들이 귀환 시 이용한 '자유의 다리', 경의선 철도를 복원한 '철마는 달리고 싶다', 인류평화와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지닌 '평화의 종' 등을 관람할 수 있다.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사목리 일원

2. 관람 안내

- 관광 안내 : 파주시청 (031-940-4361~4)
임진각관광안내소 (031-953-4744)
파주시시설관리공단 (031-954-0025)

통일관

1. 개요

지역 주민들에게 북한 실상을 바로 알리고, 북한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건전한 통일외식 확산과 통일의지를 고취하고, 북한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 관람 안내

- 관람시간 : 동절기(11월~2월) 09:00~17:00
 하절기(3월~10월) 09:00~18:00
- 관람시간은 각 지방 통일관의 현지 사정에 따라 1~2시간 정도 차이가 있음.
- 월요일 또는 화요일 휴관하거나 연중무휴 개관

3. 지역별 위치 및 연락처

지역	위 치	전 화 번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36 (자유회관 내)	(051)808-7960~3
광주광역시	광주 서구 화정2동 316-11	(062)385-1301~2
강원 고성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통일전망대 내)	(033)681-0885
강원 철원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4리 20-1 (철의삼각지관리사무소 내)	(033)450-5046
충북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70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내)	(043)256-5050, 252-1323
제 주 도	제주시 일도2동 968-2 (탐라자유회관 내)	(064)751-0191~2
인천광역시	인천 남구 송의4동 8-7 (수봉공원 자유회관 내)	(032)868-0113
강원 양구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후리 720	(033)481-9021
오 두 산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59 (오두산통일전망대 내)	(031)945-3171
경남 창원	경남 창원시 용지동 485번지 (자유회관 내)	(055)282-2332~3
대전광역시	대전 유성구 도룡동 3-1 (엑스포과학공원 내)	(042)866-5065,5164
충남 공주	충남 공주시 웅진동 98번지	(041)881-1212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 unibook.unikorea.go.kr)

1. 개요

북한자료센터는 1989년 5월 22일 정부의 특수자료 공개정책에 의해 설치되었다. 일반 국민은 물론 북한이나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 국민들의 통일문제 이해와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돕고 있다.

연건평 430평 규모에 문헌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시청각실, 북한 TV 시청실로 구성되어 다양한 북한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북한영화상영, 북한실상설명회를 정기·수시 개최하는 등 통일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2. 이용 안내

- 위치 및 교통편
 - 주소 : 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 광화문우체국(6층)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 지하철 : 1호선(종각역-6번 출구), 2호선(시청역-4번 출구),
5호선(광화문역-5번 출구)
- 이용시간
 - 평 일 : 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 휴관)
- 문의 : (02)730-6658, 720-2429 팩스 : (02)725-5752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목록

(’08년 4월 현재)

연번	단체명	연번	단체명
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4	민족문화교류재단
2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25	민족통일중앙협의회
3	경실련 통일협회	26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4	교육복지연구원	27	부산여성회
5	굿네이버스	28	부천시민연합
6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29	북방문제연구소
7	남북농업발전협력 민간연대	30	북한문제연구협의회
8	남북문화교류협회	31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9	남북문화통합교육원	32	새마을운동중앙회
10	남북사랑나누기협의회	33	서울시민문화단체연석회의
11	남북사회문화연구소	34	세계평화여성연합
12	남북청소년교류연맹	35	세계평화청년연합
13	남북청소년교류평화연대	36	세계평화통일학회
14	남북청소년통일교육진흥원	37	수원여성회
15	다물민족연구소	38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6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39	안산통일포럼
17	대한YWCA연합회	40	어린이어깨동무
18	대한기독교자유연맹	41	여성사회교육원
19	대한민국팔각회	42	여성평화통일단체연합
20	대한불교청년회	43	열린사회시민연합
21	동신대 동북아연구소	44	영세중립통일협의회
22	동학민족통일회	45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23	민족문제연구소	4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연번	단체명	연번	단체명
47	원불교청년회 평화의 친구들	71	한국YMCA전국연맹
48	원주시민센터	72	한국가족문화원
49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73	한국걸스카우트연맹
50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74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
51	정신개혁시민협의회	75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52	좋은벗들	76	한국대학원리연구회
53	초록생명평화센터	77	한국여성단체연합
54	천도교 청년회중앙본부	78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5	통일건국민족회	79	한국자유총연맹
56	통일교육문화원	80	한국종교인평화회의
57	통일교육연구원	81	한국청년연합회(KYC)
58	통일교육위원중앙협의회	82	한국통일교육학회
59	통일맞이	83	한국통일문화진흥회
60	통일민주협의회	84	한국통일여성협의회
61	통일안보교육협의회	85	한국통일진흥원
62	통일여성안보중앙회	86	한민족복지재단
63	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87	한민족복지협의회
64	평화네트워크	88	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65	평화를만드는여성회	89	한민족통일교육역사연구소
66	평화문제연구소	90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
67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91	한민족통일촉진협회
68	평화통일복지협의회	92	한반도평화운동본부
69	평화통일시민연대	93	화해평화통일교육전국모임
70	한겨레통일문화재단	94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웹사이트

• 정부 및 공공기관

기관명	주 소
청 와 대	www.cwd.go.kr
통 일 부	www.unikorea.go.kr
통일교육원(사이버통일교육센터)	www.uniedu.go.kr
남북회담본부	dialogue.unikorea.go.kr
북한자료센터	unibook.unikorea.go.kr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reunion.unikorea.go.k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www.acdpu.go.kr
국가정보원	www.nis.go.kr
교육과학기술부(인터넷평화학교)	tongil.moe.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국 방 부	www.mnd.go.kr
한국관광공사(북한관광정보)	www.travel-northkorea.com
파주시(DMZ파주안내)	www.dmzpaju.com

• 연구기관

기관명	주 소
통일연구원	www.kinu.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미래전략연구원	www.kifs.org
북한연구소	www.nkorea.or.kr
세종연구소	www.sejong.org
외교안보연구원	www.ifans.go.kr
평화문제연구소	www.ipa.re.kr



기관명	주 소
한국개발연구원	www.kdi.re.kr
한국교육개발원	www.kedi.re.kr
한국국방연구원	www.kida.re.kr
한국문화정책개발원	www.kctpi.re.kr
한국발전연구원	www.hanbal.com
현대경제연구원(북한정보뱅크)	www.nk-infobank.com

• 민간단체

기관명	주 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통일협회	www.ccej.or.kr/tongil
국제옥수수재단	www.icf.or.kr
남북나눔운동본부	www.sharing.net
남북문화통합교육원	www.togetherkorea.org
남북농업발전협력연대	www.potato.or.kr
남북어린이어깨동무	www.okedongmu.or.kr
내사랑경의선	www.kyonguisun.com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www.kcrc.or.kr
북한이탈주민후원회	www.dongposarang.or.kr
북한인권시민연합	www.nkhumanrights.or.kr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www.ksm.or.kr
좋은 벗들	www.jungto.org/gf
코리아스코프	www.koreascope.org
통일교육문화원	www.tongjiledu.or.kr
통일교육협의회	www.tongjiledu.org
통일정보센터	www.neopeace.net
한겨레통일문화재단	www.koreahana.net
한국자유총연맹	www.kfl.or.kr

• 언론기관

기관명	주 소
KBS(겨레가 하나되어)	news.kbs.co.kr/hana
KBS(아름다운 통일)	office.kbs.co.kr/tongil
KBS(북한 리포트)	news.kbs.co.kr/snwindow
MBC(통일전망대)	www.imbc.com/broad/tv/culture/unity/
이북5도신문사	www.ibukodo.co.kr
조선일보(NK조선)	nk.chosun.com
중앙일보(북한네트)	news.joins.com/nknet/
통일뉴스	www.tongilnews.com
통일정보신문	www.unityinfo.co.kr

• 대학·대학원(연구소)

기관명	주 소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ifes.kyungnam.ac.kr
고려대학교(북한학과)	nkology.korea.ac.kr
관동대학교(북한학과)	www.kwandong.ac.kr/~unikorea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북한·통일정책학과)	gspp.sogang.ac.kr
숙명여자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riku.sookmyung.ac.kr
연세대학교(통일연구원)	suny.yonsei.ac.kr/~ikus
이화여대대학원(북한학협동과정)	home.ewha.ac.kr/~nk21
중앙대학교(민족통일연구소)	cau.ac.kr/~cauind2/ku.html
북한대학원대학교	www.nk.ac.kr
한양대학교(통일정책연구소)	www.hanyang.ac.kr/code_html/H5EAJG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방송프로그램 현황

방송사	프로그램	방송시간
KBS 1TV	남북의 창	월 11:25~11:55
MBC TV	통일전망대	월 13:35~14:05
EBS TV	코리아! 코리아!	토 07:00~07:30
KBS 라디오(한민족방송)	통일열차	월~토 00:10~01:00 (16:10~17:00 재방송)
PBC 라디오(평화방송)	삼천리 우리는 하나	일 11:05~12:00
FEBC 라디오(극동방송)	통일을 향하여	토 20:20~21:00
	남과 북이 하나되어	월~토 05:30~06:00

통일교육지침서 2008 • 일반용

인쇄일 2008년 5월 13일

발행일 2008년 5월 15일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전화 02)901-7045 팩스 02)901-7082

디자인 (주)늘품플러스 (전화 02-2275-5326)

인쇄 애드윈 (전화 02-2272-7571)

비매품